

“그들은 글로벌 친구” VS “그들은 불청객”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21일) 맞이 집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정부가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이행하고 포괄적차별금지법 또는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한국 땅에 자리잡아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이방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적지 않은 이들이 정치에서부터 재계, 학계, 대중문화계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반면 저임금 '3D 업종'에 종사하며 사회의 하층부를 이루는 이들도 상당수다. 조화로운 다문화사회에 이르기까지 갈 길은 멀다.

이주민의 구성과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재 이주민 정책 지원사업 예산의 70%는 결혼이주민에 집중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까지 각종 시혜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내국인을 홀대한다는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외국인들의 밀입국과 불법취업이 만연하고 강력 범죄가 급격히 늘면서 반(反)다문화 정서가 확산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외국인 200만 돌파... '코리아 드림' 찾아 한국행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만1828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하는 수치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지난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9년만에 100만 명이 늘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21년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0.6%)이 절반을 차지했다. 체류 외국인 중 91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148만1603명(74%)이었다. 결혼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유학생의 증가가 큰 몫을 했다.

실제 국내 취업 외국인은 2000년 2만538명에서 현재 60만 8867명으로 약 30배 늘었다.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 도입으로 단순기능 인력이 늘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결혼이민자 수도 2001년 2만5182명에서 현재 15만1820명으로 증가했다.

▲이주민 곳곳서 맹활약... '친구가 되다'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이주민들과 마주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 200만1828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 해당 출신 나라별 이주민이 모여 사는 '다문화 동네' 전국 곳곳 생겨 불법체류자·외국인 강력범죄 증가세...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공직을 비롯해 사회·문화 곳곳에서 활약하는 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주민의 활약상은 1990년대 대중매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 이다도시 등 한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들이 TV를 통해 대중의 호감을 얻었다.

근래에는 아예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출연해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비정상회담'이 인기를 끌었다. 요즘은 TV만 보면 외국인이 등장할 정도다.

공직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이창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적이다.

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의 가문은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고, 러시아(옛 소련) 태생의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와 미국 출신 이민열(임미뉴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는 학계에서 유명한 외국인 교수들이다.

한국 프로축구 K리그에서 뛰던 타지키스탄 출신 골키퍼 발레리 사리체프는 2000년 외국인 선수 최초로 귀화하기도 했다.

출신 나라별로 이주민이 모여 사는 이른바 '다문화 동네' 역시 전국 곳곳에 생겨났다. 서울의 경우 한남동(미국·유럽), 이태원(이슬람·아프리카), 서래마을(프랑스), 이촌동(일본), 해와동(필리핀)을 꼽을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밀집지역은 2015년 기준 132곳에 이른다.

▲불법체류자 여전... 외국인 강력범죄 증가세
외국인 유입은 또다른 문제를 안겨준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다문화 현상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다.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중은 2000년 41.8%에서 2010년 13.4%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1만여명으로 상당하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의 물리적 한계와 무사증 입국자 이탈 수법의 조직화·지능화로 관리에 구멍이 생긴 지 오래다.

또 경찰이 '외사 치안안전구역'을 확대 개편할 정도로 외국인 강력범죄의 증가세가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건수는 2012년 2만2914건, 2013년 2만4984건, 2014년 2만8456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중 살인·강간·방화 등 강력 범죄는 2012년 1만438건, 2013년 1만984건, 2014년 1만403건으로 절반 가량 된다.

이렇다보니 외국인을 적대시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인의 31.8%가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호주(10.6%), 미국(13.7%), 독일(21.5%)에 비해 훨씬 높다.

다만 다문화에 자주 접할수록 외국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 행사에 3번 이상 참여한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1~2번 참여자에 비해 높았다.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용혁 교수는 "외국인의 범죄 건수는 전문가들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교육·자립 지원 중점 뒤야'

는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라며 "외국인 범죄 증가 속도가 가파른 현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단, 외국인 혐오증과 같은 편견은 최소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교육·자립 지원 중점 뒤야'

전문가들은 되풀이 되는 예산과 사업의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관부처가 법무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교육부 등에 두루 걸쳐 있어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서광석 센터장은 "그간 여러 부처가 제각각 정책을 펼치면서 바깥쪽 싸움을 하다보니 이주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주민 문제를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의 사회 적응에 초점을 둔 정책의 방향을 바꿔 교육과 취업 지원에 힘을 쏟되, 이주민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됐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을 벗어 버리고 이웃 또는 친구로 여기는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명지대 산업대학원 정지운 국제교류경영학 교수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 무엇보다 다문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면서 "초·중·고교에서 지역 내 다문화지원센터와 협력해 꾸준히 교육하고 전문가를 통한 사회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다문화가정협의회 정연희 상임이사는 "정부의 기부 정책이 익숙해진 이주민들은 스스로 자립하고자하는 의지가 약한 편"이라면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단순노동보다는 1년 이상 전문교육을 습득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이주민은 스스로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

OPEN
사업을 시작할 때도

CLOSED
사업이 끝난 후에도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 유준상

노란우산공제가 대한민국 사장님의 힘이 되겠습니다

절세혜택
연 300만원 소득공제로
최고 125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납입부금에 연 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 후 2년간)

※ 2016. 1. 1일 이후 가입한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063-214-6609
www.8899.or.kr

※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저축보육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연본부